

캐디 등도 출산지원금... 육아휴직 男 급여 50만원 ↑

〈특수고용직〉

〈5만명, 150만원〉

〈200만원→250만원〉

저출산 대책 들여다보니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만 8세 이하 자녀 둔 부모엔
근로시간 1시간 단축 제도화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하고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혜택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위라벨’ (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는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선 출산휴가급여 시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는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했다.

앞으로 이들은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는다. 새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될 여성은 약 5만명이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없어진다.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감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신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 카드는 원래 임신·출산 진료비 결제용이었으나 앞으로는 아동의료비 결제도 가능해진다. 카드 한도액도 단태아 기준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된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중위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목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현행 (삶의 질 지수 29위)	2022년 목표 OECD 평균 15위 내외 (독일 13위, 프랑스 18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	5만명 (고용보험 미적용 전 근로자)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질환	5종	11종
1세 아동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16.5만원	5.6만원 (↓ 6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	8만명	11.7만명 (↑ 1.5배)
(초등)학교 안팎 온종일돌봄 이용자	33만명	53만명 (↑ 1.6배)
(영유아) 공보육 이용률	국공립 어린이집 13%, 국공립 유치원 25%	국공립 어린이집 40%, 국공립 유치원 40%
(아이돌봄비) 이용 아동 수	9만명	18만명 (↑ 2배)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균형(위라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0.3만명	8천명 (↑ 3배)
남성 육아휴직자 (휴직자 대비 남성 비중)	1.2만명 (13%)	2.4만명 (↑ 2배, 20% 내외)**
위라벨 중소기업	-	2만개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아동 연령	14세	18세

*2017년 자료를 2019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출, **독일(24.9%)~핀란드(18.7%) 수준 목표

자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연암뉴스

소득 120%) 이하이면 아이돌봄비를 지원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중위소득 150%)까지도 지원 대상이 된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근로 단축 기간은 최대 2년이다. 필요에 따라 하루 5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이 중 1시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준다.

이렇게 되면 육아휴직 1년 후 복귀한

부모도 눈치 보지 않고 근로시간을 1년간 단축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도 큰 부담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한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에 휴

가를 분할 사용하도록 해 편의를 높인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린다.

한편, 정부는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없애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도 시동을 걸었다.

우선 미혼모가 자녀를 기르던 중 아버지가 자녀 존재를 인지해도 종전의 성(姓)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된다.

사실혼 부부도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민등록표상에 계부·계모 등의 표현이 드러나지 않게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또 혼인 여부에 따라 취업·직무 지원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임신·출산·양육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원칙적으로 따르는 ‘부성 원칙주의’의 수정, 혼인 여부에 따라 신분을 규정하는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상 문제, 사실혼에 대해 법률상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주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 사안들은 사회 합의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민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출산지원금 지원

- 자영업·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 출산지원금 지원. 월 50만원씩 90일간 총 150만원

1세 아동 의료비 대폭 감감

- 고위험 산모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범위, 기존 5개 질환→11개로 확대
- 국민행복카드 사용 기한 확대에 분만에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가능
- 단태아 60, 다태아 100만원씩 각 10만원 인상
- 만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건보 부담률 기준 21~42%에서 5~20% 정도로 감감 (평균 본인부담액 16만5천원→5만6천원 상당으로 66% 감소. 감기 등으로 동네병원 방문시 초진료 3천200원→700원)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20%→150%까지 확대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553만원 이하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 이용금액 정부지원 비율 최대 90%까지 높임
- 아이돌봄비 현재 2만3천→4만3천원 확대, 2022년까지 이용 아동 규모 9만→18만명
- 공동육아나눔터 113→160개 시군구로 확대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 육아기 아동 부모, 1년 육아휴직 사용했다더라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 가능. (상한액 200만원기준 통상임금의 100% 받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향 상향

- 급여 지원 상한액 200만원→250만원
- 아빠·엄마가 동시 육아휴직 사용 방안도 추진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확대

- 남성이 사용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 현행 3일→10일로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한해 유급휴가 5일분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

자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암뉴스

美中 ‘무역분쟁’ 오늘 방아쇠... ‘스노우볼 이펙트’ 현실화 되나

〈눈덩이 효과〉

年 500억달러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 순차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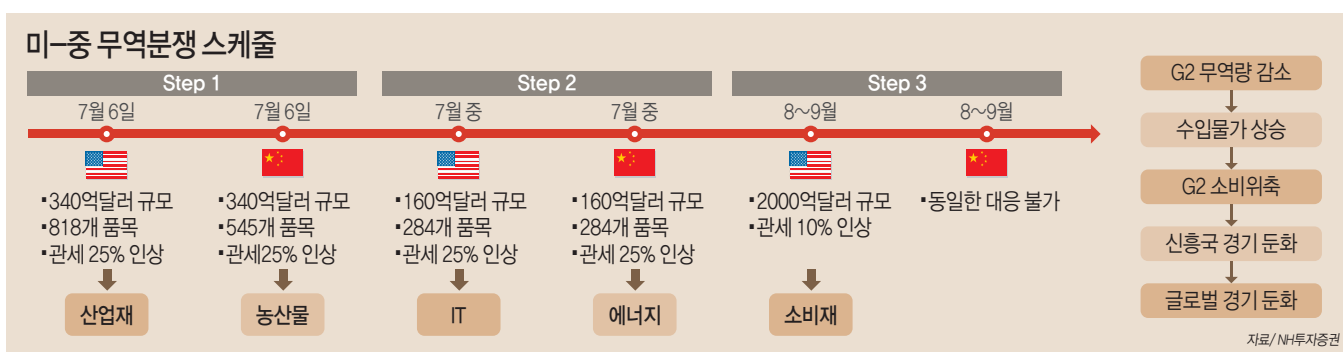
韓, 中 경제 의존도 높아
中 성장률 하락엔 큰 타격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I will make things worse for you, so that you will do something that I want.)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트럼프의 협상전략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무역전쟁 가능성은 제한적 (a low probability event)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사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브루스 카스만, JP모건 이코노미스트)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6일은 공식 방아쇠가 당겨지는 날이다. 미국과 중국은 이날부터 연간 500억달러의 상대국 수입제품에 25%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말의 전쟁’에서 ‘행동의 전쟁’ 단계로 비화되면서 위기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무역전쟁이 G2 갈등을 넘어 ‘미국대비 미국(US Vs. Non-US)’ 구도로 이어질 경우 ‘스노우볼 이펙트(Snowball Effect·눈덩이 효과)’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세계교역이 위축되고 이는 세계경제 침체의 도화선이 된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



국의 대미 수출액 500억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이 없지만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전체 수출은 6.4% 감소한다.

◆ 무역전쟁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어지는 불확실성

5일 재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이후 미국의 천문학적인 관세 폭탄과 이에 대항하는 해당국들의 보복 관세 부과 및 국제기구 제소 등으로 무역전쟁이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 등은 미국이 자국에 대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와 1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자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결정했다. 멕시코는 별도로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상응하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캐나다는 7월 1일부터 130억달러여치의 수입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철강에서부터 요

구르트, 커피 등 식품까지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리어 확전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이미 (미국산) 대두에 대해 16%의 세금을 부과했고 캐나다도 우리의 농산물에 대해 무역 장벽을 설정했다”고 비난하면서 추가 대응 조치를 시사했다.

터키 정부는 미국이 터키에 수출하는 18억 달러(약 2조원) 규모의 수입품에 2억 6700만 달러의 관세를 부과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매긴 미국의 관세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러시아는 WTO 제소 절차와는 별도로 미국에 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현재까지 관세가 부과된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미국의 무역전쟁이 중국 외에 다른 비 미국(Non-US)으로 격화한다면 미국 수입액의 17.5%에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비

미국의 보복관세도 하나 둘 현실화되며 그 규모가 누적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수출액의 7.25%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보에 따라 비중은 늘어날 전망이다”면서 “무역전쟁의 규모가 점차 커지며 글로벌 교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공교롭게 타이밍이 맞은 것일 수도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책대과 무역전쟁 이슈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축소 국면과 맞물려서 영향력이 더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자산을 줄여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 유럽중앙은행(ECB)도 양적완화를 중단해 글로벌 유동성 공급은 이제 축소세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미-중 무역전쟁으로 韓 0.50%p ↓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깊이는 상상 이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미국과 중국의 제재규모가

1500억달러가 되면, 미·중 GDP가 0.3~0.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다.

유럽과 캐나다도 7월부터 미국 대형 이륜차에 보복관세를 표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과 유럽의 관세인상으로 무역비용이 10% 오르면, 전 세계 GDP가 1.4%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 둔화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부가가치 기준 수출량으로 따졌을 때 한국의 중국 경제의존도는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국 가운데 가장 컸다. 지난 2016년 국제통화기금(IMF)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GDP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한국의 성장률은 0.50%포인트(일본 -0.25%p, 세계경제 -0.23%p)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보호무역 조치에 따른 직·간접 수출 차질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수출의 0.5%(명목 GDP의 0.2%)로 추정된다. 또 추세가 지속할 때 수출차질은 2017~2020년 중 수출의 0.8% 수준까지 확대된다.

무역규제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수출이 약 0.41%포인트 하락한다. 이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조사 개시 직후부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이 2~3년간 하락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글로벌 교역 둔화로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는 간접 차질 규모로 수출의 약 0.05% 감소한다.

/김문호 기자 kmh@